<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물 건너간 석유화학 빅딜 ”

말도 많고 설도 많았던 석유화학 빅딜(Big Deal)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끝에 사산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Mitsui 컨소시엄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한국정부나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요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것은 사실이나 Mitsui의 투자제안을 접한 현재의 심정은 Mitsui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싶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삼성종합화학 및 현대석유화학의 자산가치를 ADL이 평가한 2조1000억원이나, 세동-SRI가 평가한 1조8000억원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1조원으로 평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5000억원을 투자해 대산단지의 지분 25%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기에 채권단이 부채 5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Mitsui 투자액 5000억원 및 융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3조2000억원 정도를 후순위채권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요구조건이다.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채무 5조7000억원을 아예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강요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본 수출입은행의 1조5000억원 융자조건이 산업은행의 전대차관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요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한국정부가 지급보증한 선순위채권으로 융자해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과 현대의 경영상태가 지극히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외환사정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면서까지 외자를 유치할 만큼 달러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Mitsui가 석유화학제품 수출권까지 요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다. Mitsui의 요구가 관철되면 Mitsui가 실질적으로 나프타 수입권까지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의 커미션을 챙길 수 있다. 실투자액 5000억원의 10% 안팎을 커미션으로 챙기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일본 금융권의 이자율 0-3%는 물론이고, 한국의 정기예금 이자율 7-8%보다도 높은 고리대금업을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공식화하겠다는 도둑심보인 것이다.

결국 5000억원을 투자해 순투자비 3조원 이상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1/3에 달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아마도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한국을 집어삼킨 19세기 말의 불평등조약이 간절했던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평등한 요구조건을 들어준다는 것은 삼성과 현대그룹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꼴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Mitsui 컨소시엄의 대산단지 투자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선된 투자계획을 기대한다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채권단은 석유화학 빅딜의 종료를 선언해야 하고, 전경련은 대산단지 통합추진본부를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또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통합작업을 추진한답시고 국가자산을 팔아먹는데 앞장선 일부 인사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사법적인 처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석유화학 빅딜을 주도한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이 일정부문 책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빅딜을 구상한 것은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7대 업종으로 확대된 이면에는 대통령의 빅딜정책을 담보로 부실부채를 국가에 전가시키겠다는 삼성과 현대그룹 및 산업자원부 일부 관계자들의 잔꾀가 작용했고, 결국에는 순수한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을 담보해 재벌을 살찌우는 것으로 왜곡됐다. 김태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기한 인적 청산작업이 필요한 배경인 것이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왜곡된 석유화학 빅딜을 더이상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빅딜의 종료를 선언하는 대신, 부채비율 200%를 비롯 상호출자 제한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현대와 삼성은 스스로 석유화학 투자를 결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9/9/13>